

46,827 개 안건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했나

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은 주주가 아니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점검이 확인한 것을 서식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 자료의 문제로 본다. 자본시장법은 운용사에 행사 사유와 미행사 사유를 모두 공시하고, 투자자가 그 적정성을 판단할 자료를 함께 내도록 정한다. 사유를 일괄 기재하고 기본지침만 공시하면 그 자료가 공시에 담기지 않는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은 2026 년 7 월 7 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항목	값	비고
점검 대상	285 개 운용사	분석 기간 2025 년 4 월~2026 년 3 월
분석 안건	46,827 개	
의결권 행사율	91.8%	
반대율	8.2%	
공시 기한	매년 4 월 30 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1 조 제 2 항
공시대상 보유 기준	자산총액의 5% 또는 100 억원	같은 법 시행령 제 90 조 제 1 항

285 개 운용사의 46,827 개 안건을 분석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였다. 발표문은 이 수치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적었다. 공모운용사를 중심으로 행사사유 기재와 공시서식 준수 등 정량적 측면에서 전년 대비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함께 적었다.

반면 중소형사와 일반사모운용사에서는 인프라 구축 미흡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사사유 일괄 기재, 기본지침만 공시, 공시서식 미준수도 함께 적었다. 후속 조치로는 2026 년 7 월 13 일 CEO 간담회와 7~8 월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를 제시했다.

점검은 2026 년 4 월 15 일에 예고된 것이다. 당시 자료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 여사를 점검 대상으로 적었다. 공모운용사 77 사에 대해서는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와 수탁자책임 관련 조직·인력 체계, 이해상충 관리를 함께 본다고 밝혔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은 수익증권을 가진 수익자이고 주주가 아니다.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지는 쪽도 그 사람이 아니다. 자본시장법 제 87 조 제 1 항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 79 조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상대방을 투자자로 정한다. 의무를 지는 쪽도, 표를 행사하는 쪽도 운용사다.

본인이 행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조문은 공시를 함께 정한다. 시행령 제 90 조는 기록 대상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 억원을 넘는 보유분으로 정한다. 행사 여부와 그 내용,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시행령 제 91 조 제 2 항은 직전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의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 월 30 일까지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정한다. 점검 기간이 2025 년 4 월~2026 년 3 월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사율 91.8%의 나머지는 행사되지 않은 안건이다. 반대율 8.2%와 수치가 같지만 다른 항목이다. 행사하지 않은 데에도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대차로 빌려준 주식, 기준일 문제, 소량 보유가 그런 예다. 어느 사유였는지는 공시된 사유를 읽어야 알 수 있다. 제 87 조 제 8 항이 미행사 사유를 공시 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적된 세 항목은 성격이 같다. 일괄 기재는 안건마다 다른 판단을 한 문장으로 적는 것이다. 기본지침만 공시는 시행령 제 91 조 제 4 항이 요구하는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을 원칙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다. 공시서식 미준수는 정해진 항목을 채우지 않는 것이다. 제 87 조 제 9 항은 투자자가 행사와 미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시하도록 정한다. 세 항목은 모두 그 자료를 공시에서 빠지게 한다. 서식을 지켰는지가 아니라 밖에서 검증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조문이 따로 있다. 제 87 조 제 2 항은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해당하면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한다. 그 관계는 계열 투자매매·중개업자와 그 계열회사, 운용사의 대주주다(시행령 제 89 조 제 2 항). 반대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지 말라고 요구한다. 해당 여부는 시행령 제 91 조 제 4 항에 따라 공시로 확인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이 아니라 자율규범이다. 2026 년 6 월 8 일 공청회 자료는 코드를 원칙 중심 규범이라 적었고, 이행점검 체계 도입을 개정 항목으로 제시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물리는 사람은 주식형·인덱스·액티브 펀드에 가입해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 돈으로 산 주식에는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 변경, 합병 승인 같은 안건의 의결권이 따른다.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쪽은 운용사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다. 시행령 제 90 조는 공시 대상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 억원을 넘는 보유분으로 정한다. 그 밑의 보유분은 행사했든 하지 않았든 공시로 확인되지 않는다. 분석 안건 46,827 개에 행사율 91.8%의 나머지 8.2%를 적용하면 약 3,800 개다. 발표문에 안건 수로 제시된 값이 아니라 비율을 적용한 계산값이다.

펀드 계좌 화면에는 의결권 항목이 없다. 행사 내역은 시행령 제 91 조가 정한 별도의 공시로 나가고, 그 공시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1 년치를 한 번에 낸다. 2025 년 4 월 1 일 주주총회의 안건은 2026 년 4 월 30 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안건이 처리된 날과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날 사이가 최장 13 개월이다. 그 사이에 환매한 사람은 가입 기간의 행사 내역을 뒤늦게 확인하게 된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발표문이 미흡 사항으로 확인한 것은 행사사유 일괄 기재와 공시서식 미준수다. 그런데 발표문에 적힌 후속 조치는 CEO 간담회와 설명회이고, 서식을 지키지 않은 공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2026년 4월 예고는 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운용사 500 여사를 점검 대상으로 적었다. 7월 결과는 285개 운용사의 46,827개 안건을 분석한 것이고, 발표문은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 공시 의무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을 넘는 보유분에만 붙는다. 그 밑의 보유분은 행사 여부와 사유가 공시로 확인되지 않고, 발표문도 그 범위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범이어서 참여하지 않은 운용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6월 공청회에서 이행점검 체계 도입이 개정 항목으로 제시됐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가입한 펀드의 운용사가 거래소에 공시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찾아, 안건별로 행사 방향과 사유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같은 문장이 여러 안건에 반복돼 있으면 일괄 기재다.
- 같은 공시에 함께 나오는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을 열어, 원칙만 적혀 있는지 안건 유형별 판단 기준까지 적혀 있는지 대조한다.
- 행사하지 않은 안건이 있으면 그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자본시장법 제 87조 제 8항을 들어 운용사에 서면으로 묻는다.

금융회사

- 안건마다 판단 근거를 따로 적고, 행사하지 않은 안건은 사유를 안건별로 적는다. 내부 지침은 원칙 외에 안건 유형별 기준까지 공시한다.

당국

- 사유 일괄 기재와 공시서식 미준수를 설명회 항목이 아니라 점검 뒤 처리 절차가 정해진 항목으로 다룬다. 시행령 제 91조 제 4항의 공시 항목이 제 87조 제 9항의 판단 자료로 충분한지 서식 단위로 점검한다.

칼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2026년 6월 8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항목 가운데 이행점검 체계가 어떤 형태로 확정되는지. 코드 본문에 들어가는지, 논의 항목으로 남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A로 가면 · 이행점검 체계가 코드 본문에 들어가면 참여 기관의 공시 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 다만 코드는 자율규범이므로 참여하지 않은 운용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로 가면 · 이행점검이 논의 항목으로 남으면 자본시장법 제 87조와 시행령 제 91조의 법정 공시만 남는다. 그 공시의 충실성은 해마다 반복되는 감독당국 점검과 설명회에 의존한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개정 코드 본문에 이행점검의 주체와 결과 공개 방식이 조문으로 들어가는지. 시행령 제 91조 제 4항의 공시서식이 안건별 사유를 따로 적도록 개정되는지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주주총회와 의결권

란	편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기업공시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
금융상품	주식형 펀드 인덱스펀드 액티브펀드 일반 사모펀드
금융사건	1 대 0.35,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합병비율 1,768 억을 넣어 2 년 4 개월 만에 9,000 억을 벌었다 1 조 6,679 억원어치 펀드가 환매를 멈췄다
피해 구제	금융회사에 민원 넣기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285 개 운용사, 분석 기간 2025 년 4 월~2026 년 3 월, 분석 안건 46,827 개, 의결권 행사율 91.8%, 반대율 8.2%,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1 차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 2026.7.7 발표 원문 전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812
공모운용사 중심으로 "행사사유 기재, 공시서식 준수 등 정량적 측면에서 전년 대비 개선", 중소형사·일반사모운용사의 인프라 구축 미흡과 "행사사유 일괄 기재, 기본지침만 공시, 공시서식 미준수" 다수 확인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812
후속 조치 — 2026 년 7 월 13 일 CEO 간담회, 7~8 월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	1 차	위 동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812
2026.4.15 점검 예고 — 대상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500 여사)",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등 공시 현황", 공모운용사 77 사는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와 수탁자책임 관련 조직·인력 체계, 이해상충 관리를 추가 점검, 대상 기간 2025.4.1~2026.3.31	1 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산운용제도팀 2026.4.15 발표 원문 전제.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9447
2026.2.24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 의결권 행사·주주활동이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는 진단, 전담조직·의사결정기구·KPI 등 업무 체계 정비 요청, 2026 년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점검 예고	1 차	금융감독원 2026.2.24 발표 원문 전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7248
자본시장법 제 79 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9 조 조문 원문 확인. 의무의 상대방이 투자자임을 조문에서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4739&cseq=1962629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자본시장법 제 87 조 제 1 항 —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1 차	자본시장법 제 87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 hseq=64739&cseq=1962637
자본시장법 제 87 조 제 2 항 —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차	위 동일. 계열 관계 등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정한 항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 hseq=64739&cseq=1962637
자본시장법 제 87 조 제 7 항·제 8 항·제 9 항 — 행사 여부와 그 내용(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포함)을 기록·유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행사 내용과 미행사 사유를 공시하며, 투자자가 행사· 미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 차	위 동일. 제 9 항 원문 "necessary for investors to ascertain whether the exercise of, or failure to exercise, voting rights was proper"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 hseq=64739&cseq=196263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9 조 제 2 항 — 의결권 행사가 제외되는 관계는 계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	1 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9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 hseq=68539&cseq=219751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0 조 — 기록·유지 대상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또는 100 억원을 초과하는 보유분이고, 행사 여부와 내용 또는 행사하지 아니한 사유를 기록해 영업보고서에 포함한다	1 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0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 hseq=68539&cseq=219751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1 조 제 2 항·제 4 항 — 직전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 월 30 일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고,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집합투자기구별 주식 보유현황·제 89 조 제 1 항 및 제 2 항 관계 해당 여부를 함께 공시한다	1 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1 조 조문 원문 확인. 점검 기간이 2025.4~2026.3 인 근거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 hseq=68539&cseq=2197514
한국 스톱어스십 코드 개정 공청회(2026.6.8) — 코드를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기관투자자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는 원칙 중심 규범"으로 적었고, 개정 항목으로 적용 범위 확대, 이행수준 내실화, ESG 요소 및 위탁운용사 관리 의무 명확화, 공동관여활동 원칙 반영, 이행점검 체계 도입을 제시	1 차	금융위원회 2026.6.8 공청회 자료 원문 전제.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2337
미행사 비율 8.2%	파생	100% - 의결권 행사율 91.8% = 8.2%. 발표문에 미행사율로 제시된 값이 아니라 행사율의 나머지를 계산한 값이다. 발표문의 반대율 8.2%와 수치가 같으나 다른 항목이다
의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안건 약 3,800 개	파생	46,827 개 × 8.2% = 3,839.8 개 → 약 3,800 개. 행사율의 분모를 분석 안건 46,827 개로 본 계산이며 발표문에 안건 수로 제시된 값이 아니다
안건 처리일과 공시일 사이 최장 약 13 개월	파생	시행령 제 91 조 제 2 항의 공시 대상 기간이 직전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이고 공시 기한이 매년 4 월 30 일이므로, 2025.4.1 안건은 2026.4.30 까지 공시하면 된다. 두 날짜의 간격을 계산한 값이다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514 자	16 건	13 건 (81%)	9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2027 년 4 월 30 일까지 공시되는 2026 년 4 월~2027 년 3 월분 의결권 행사 내역에서 행사사유가 안전별로 적혔는지,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이 원칙 외에 안전 유형별 기준까지 담겼는지. 다음 점검 결과 발표문에 같은 미흡 항목이 다시 적히는지, 후속 조치가 간담회·설명회 외의 절차로 적히는지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